

공 개



의안번호	제 403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12. 2. (제 21 차)

의  
결  
사  
항

루미너스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2. 2.

## 1. 의결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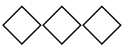



루미너스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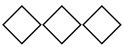


루미너스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등이 적발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동법 제449조(과태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및 동법 제43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 대표이사  : 해임요구
- 前 대표이사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 前 대표이사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 감사  : 직무정지3월
- 前 감사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3월 상당)

### 나.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 루미너스투자자문(주) : 과태료 229.6백만원 부과
- 대표이사  :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 前 대표이사  : 과태료 2백만원 부과
- 前 대표이사  : 과태료 7.6백만원 부과
- 前 대표이사  :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 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루미너스투자자문(주) : 과태료 13백만원 부과

라.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 루미너스투자자문(주) :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마.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前 대표이사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6월 상당), 과태료 125백만원 부과
- 前 이사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3월 상당),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 前 대리 ◆◆◆◆ : 과태료 16.2백만원 부과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0.20.) 심의필
-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2020.10.28.) 심의필

## <별지>

루미너스투자자문(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 기관에 대한 조치

○ 루미너스투자자문(주) : 과태료 322.6백만원 부과

##### - 조치사유

-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과태료 229.6 백만원 부과)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태료 13백만원 부과)
-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과태료 80백만원 부과)

#####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항, 「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제1호, 제10호 및 제11호, 「舊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제3호, 「지배구조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지배구조법」 제41조(공시)

\* 2015.7.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어 2016.8.1. 시행되기 전의 것

-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4항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 「지배구조법」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1의3호 및 제9호, 「금융기관의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별표3>,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별표3> I-2.

## □ 임·직원 에 대한 조치

### ○ 대표이사 ◆◆◆ : 해임요구,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 - 조치사유

- 회계처리기준 위반
-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과태료 16백만원 부과)

####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제3호
- 「지배구조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3항, 「지배구조법」 제41조(공시) 제1항
- 「자본시장법」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지배구조법」 제43조(과태료) 제3항,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1호,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별표3>,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별표3> I-2.

### ○ 前 대표이사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과태료 2백만원 부과

#### - 조치사유

- 회계처리기준 위반
-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과태료 2백만원 부과)

####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제3호
- 「지배구조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 「자본시장법」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지배구조법」 제43조(과태료) 제3항,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1호,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별표3>,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별표3> I-2.

○ 前 대표이사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과태료 20.1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회계처리기준 위반
-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과태료 7.6백만원 부과)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과태료 12.5백만원 부과)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제3호
- 「지배구조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제41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 「자본시장법」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2항, 「지배구조법」 제43조(과태료) 제3항,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1호,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별표3>, 「금융기관의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별표3> I-2.

○ 前 대표이사 ■■■ :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과태료 3.6백만원 부과)

- 법적근거

- 「지배구조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제41조 제1항
- 「지배구조법」 제43조(과태료) 제3항

○ 감사 ♠♠♠ : 직무정지3월

- 조치사유

· 회계처리기준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제3호

· 「자본시장법」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금융기관의검사 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2호,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별표3> I -2.

○ 前 감사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3월 상당)

- 조치사유

· 회계처리기준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제3호

· 「자본시장법」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금융기관의검사 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2호,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별표3> I -2.

○ 前 이사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3월 상당),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과태료 15백만원 부과)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 「자본시장법」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2항,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2호,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 3>

○ 前 대리 ◆◆◆ : 과태료 16.2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과태료 16.2백만원 부과)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2항,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 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 3>



## 관계 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회계처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계 처리준칙 및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를 것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③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한 때
10.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
11.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舊제418조(보고사항)**(“16.8.1. 법률 제13453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때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 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9. 제41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 제3항 또는 제41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舊제449조(과태료)**(‘17.8.19. 법률 제14817호로 시행되기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2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②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인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②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71조(보고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다. 법 제33조제3항(법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5호	3,00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려. 법 제418조(법 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19호	1,800

舊 [별표 22] ('17.10.19. 대통령령 제28384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러. 법 제33조제4항(법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5호의2	1,000
려. 법 제418조(법 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19호	1,800
더. 법 제33조제3항(법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5호	500
하. 법 제418조(법 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제19호	600

## □ 금융투자업 규정

**제2-16조(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① 영 제3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가. 법 제4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0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제2항제1호, 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법 제418조제10호(제2-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제3-70조(경영공시)** ① 영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법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영업보고서의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방법 등은 협회가 정한다.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공시사항 등) ② 법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 아닌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투자회사(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시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은 별지 제2호와 같다.

[별지 제2호]

주요 경영상황 공시 항목

9.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수시공시 항목	공시양식	작성대상	비고
가.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유형고정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9-1-1 ~ 9-1-2	공통 (집합투자업자 제외)	

11. 기타 법인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수시공시 항목	공시양식	작성대상	비고
아. 주주총회소집 결의	11-9	공통 (집합투자업자 제외)	

舊 [별지 제2호] ('18.12.31. 개정되어 '19.1.1. 시행되기 전의 것)

주요 경영상황 공시 항목

11. 기타 법인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수시공시 항목	공시양식	작성대상	비고
차. 주주총회소집 결의 및 임시·정기주주총회 결과	11-11-1 ~11-11-3	공통(집합투자 업자는 제외)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들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행위별 제재양정기준**

**I -2. 회계 부당처리(상호저축은행은 제외)**

1. 제재대상
  -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등 회계처리기준 및 개별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회계관련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
2. 제재기준
  - 회계 부당처리의 발생동기 및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

분 식 규 모 (규모비율)			
I (기준비율의 8배 이상)	II (4배 이상 8배 미만)	III (2배 이상 4배 미만)	IV (1배 이상 2배 미만)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 1) 규모비율 산정 등 제반사항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의 ‘감리결과 조치 양정기준’을 준용

- 회계 부당처리는 회사의 경영방침 등에 기인한 사항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주된 책임자로 제재한다. 다만, 담당 임직원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제재할 수 있다.

- 상근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감독책임(주된책임자보다 감경)을 부과한다.
  - 다만, 감사(위원)가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는 등 감사로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위법행위를 사실상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제재할 수 있다.
- 회계 부당처리의 발생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되거나 규모가 큰 경우(관련 임원 문책경고 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병과 한다.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공시)** ①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③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舊제43조(과태료)**(‘17.10.19. 법률 제14818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회계처리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표1> 규모금액산출표

1. 규모금액의 산출

가. 대상 회계연도 말의 자산총계	:	억원
나. 대상 회계연도의 매출액 (*1)	:	억원
다. 회사의 규모조정계수 적용 전 규모금액 (*2)	:	억원
라. “라” 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	:	
마. 규모금액[다(가 또는 나)÷라]	:	원

(\*1) 금융기관, 서비스업종 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보며, 대상기간이 분·반기인 경우 원칙적으로 분·반기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규모금액”이란 위법행위가 A유형 및 C유형(D유형 중 주식기재사항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담보제공, 질권 설정, 지급 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로서 관련 채무잔액의 130% 초과금액, 또는 자신을 위하여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금액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심사·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B유형 및 D유형의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산총계 또는 매출액 등을 말함. 단,



- (\*1). 금융기관, 서비스업종 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보며, 감리대상기간이 분·반기인 경우 원칙적으로 분·반기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규모금액”이란 위법행위가 A유형 및 C유형의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B유형 및 D유형의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산총계 또는 매출액 등을 말함. 단, B유형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의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3). 비상장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1> 2.에 따라 산출된 규모조정계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조정된 규모조정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 가) 사업보고서 또는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법인
  - 나) 거래소로부터 상장예정기업으로 통보받은 법인
  - 다) 차입금 의존도가 50%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차입금 의존도는 ‘차입금÷총자산×100’로 계산하며 차입금에는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 차입금, 사채 등 이자 지급의무가 있는 제반 부채를 포함한다.
  - 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마)금융회사
  - 바) 기타 위법행위가 금융시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법인

## 2. 규모조정계수

규모금액(억원) 구간		규모조정계수		
최소	최대	기본	보간율	구간 최소금액 (억원) 초과값
0	100	0.4	-	
100	300	0.6	+ 0.00100000	×
300	700	0.8	+ 0.00050000	×
700	1,000	1.0	+ 0.00066667	×
1,000	2,000	1.2	+ 0.00030000	×
2,000	5,000	1.5	+ 0.00010000	×
5,000	10,000	1.8	+ 0.00006000	×
10,000	20,000	2.1	+ 0.00003000	×
20,000	50,000	2.4	+ 0.00002000	×
50,000	100,000	3.0	+ 0.00001200	×
100,000	200,000	3.6	+ 0.00000700	×
200,000	500,000	4.3	+ 0.00000233	×
500,000	-	5.0	-	×

※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및 금융기관으로서 규모금액이 70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그 규모조정계수를 “1.0”으로 본다.

## □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문단 2.7 :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I(금융업)}** 문단 3.1 : 이 장의 목적은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하여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장에서 금융업이란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수급을 중개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회사란 금융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32** :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부록A. 적용보충기준 문단 6.A8** : 다음의 경우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루미너스투자자문(주)

2. 제재조치일 : 2020. 12.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관경고</li><li>○ 과태료 322.6백만원 부과</li></ul>
임원(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임요구 부과(과태료 16백만원)</li><li>○ 직무정지 3월 부과</li><li>○ 주의적 경고</li><li>○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부과(과태료 2백만원)</li><li>○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부과(과태료 20.1백만원)</li><li>○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3월 상당) 부과(과태료 15백만원)</li><li>○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부과(과태료 3.6백만원)</li><li>○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3월 상당)</li><li>○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부과 2명</li></ul>
직원(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부과(과태료 16.2백만원)</li></ul>

4. 제재대상사실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 ☐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32조 및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시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 루미너스투자자문(주)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주) 주식 손상차손 ×억원{제××기('××.×.××.), 제××기('××.×.××.)}, ○○○(주) 주식 손상차손 ×억원{제××기(××.×.××.), 제××기('××.×.××.)}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 나.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 1) 경영상황 보고·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루미너스투자자문(주)은 20××.×.××. ~ 20××.×.×. 기간 동안 '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주총회 결과' 및 '유형고정자산 양수도 결정'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상호변경, 본점 이전 등) (자본시장법 제418조)

- 금융투자업자는 상호 변경, 본점 이전, 지점폐지할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루미너스투자자문(주)은 20××.××.××. ~ 20××.×.×. 기간 동안 발생한 보고사항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3)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임원 선임·해임보고) (舊자본시장법 제418조 제3호)

-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루미너스투자자문(주)은 20xx.xx.xx. ~ 20xx.x.xx. 기간 동안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4) 임원의 선임·해임 사실 보고·공시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7조)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루미너스투자자문(주)은 20xx.xx.xx. ~ 20xx.xx.xx. 기간중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을 7 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 ■■■, ◆◆◆는 동사의 임원으로서 공시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음

#### 5) 주주총회 결과 공시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41조 제1항)

-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 비율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루미너스투자자문(주)은 20xx.x.x. ~ 20xx.x.xx. 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과를 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 ◆◆◆는 동사의 임원으로서 공시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음

####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2항 제3호 다목
2. 「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제1호, 제10호 및 제11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1항
3. 「舊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제3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1항

\* 2015.7.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어 2016.8.1. 시행되기 전의 것

4. 「지배구조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5. 「지배구조법」 제41조(공시), 「지배구조법시행령」 제32조(공시)

#### 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루미너스투자자문(주)는 금융위원회에 20××.×월, 20××.×월 및 20××.×월에 대한 각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4항

#### 라.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루미너스투자자문(주)는 20××.××.××.~20××.×.×. 기간 중 ×개의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임재산 운용인력과 고유재산 운용인력이 △△△△△ 등 특정 공모주 청약 여부를 협의하여 ×개의 일임계좌와 ×개의 고유계좌에서 같은 날, 같은 종목을 청약하는 등 고유재산 운용 업무와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 마.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위반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등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 루미너스투자자문(주)는 20××.×.××.~20××.×.××.(검사종료일) 기간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면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주)▲▲▲▲▲▲▲▲▲▲ 등 ××명)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제1항

#### 바. 영업에 관한 자료 등 관련 기록 유지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루미너스투자자문(주)는 검사종료일(××.×.××.) 현재 20××.×.××.~20××.××.××. 기간 중 체결된 투자일임계약 전체에 대한 투자자 일반정보 및 20××.×.××. 선임된 임원 전체의 자격요건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2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 사. 투자자 자산 보관·예탁 금지 위반

- 투자자문·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루미너스투자자문(주)는 20××.××.××. 투자자 ▽▽▽과 전환사채 인수일임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 ×천만원을 수령한 후 루미너스투자자문(주)가

보유 중이던 ▼▼▼▼제×호 전환사채를 ▽▽▽에게 매도하였으나,

루미너스투자자문(주)는 동 전환사채를 루미너스투자자문(주) 명의계좌에 ▼▼▼▼제×호의 청산종결일인 20××.××.×.까지 보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아.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및 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명의 금융거래 금지 위반 등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의 1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은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① 루미너스투자자문(주) 前 대표이사 □□□은 20××.×.××.~20××.×.××. 기간 중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② 루미너스투자자문(주) 前 사내이사 ●●●는 20××.×.××.~20××.×.××.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 ③ 루미너스투자자문(주) 前 대리 ◆◆◆는 20××.×.××.~20××.×.××.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4항

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확인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루미너스투자자문(주)는 20××.××.××.~20××.×.××. 기간 중 임직원의 금융  
투자상품 매매명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4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검사국
연락처	02-2100-2663	02-3145-7699